

리비아 사태와 글로벌 정보전쟁:

24시간 영어뉴스 채널을 통해서 본 미디어 외교의 현장*

김성해** · 유용민*** · 김재현**** · 최혜민*****

디지털 혁명에 따른 글로벌 공론장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정보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제 여론광장을 통한 정보경쟁이 불가피한 오늘날, 미디어 외교는 국가 간 정보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했다. 미디어 외교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24시간 영어뉴스 채널이 자국의 대외정책에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이런 배경에서 리비아 사태와 이해관계가 있는 6개국의 대표적인 뉴스채널(씨엔엔-인터내셔널, 비비씨-월드, 알 자지라, 도이치 벨레, 프랑스24, 러시아 투데이)의 관련 보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의제설정, 태도, 정보원 활용, 원인과 대안 제시, 프레임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각 뉴스채널의 보도는 자국(自國)의 리비아 정책과 연동되는 특징을 보였다. 리비아 개입에 우호적인 국가와 비판적인 국가 간의 보도 양상은 뚜렷하게 구분되었고, 리비아 개입에 우호적인 국가들 간에도 정부 정책의 수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 채널은 국제사회가 잘 모르는 리비아 사태의 ‘맥락’ 정보 전달에 더 치중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각국 뉴스채널들이 자국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리비아 사태를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하고 나아가 자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대한 ‘수신’과 ‘발산’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국의 입장과 관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Korea 24’와 같은 전문화된 24시간 영어뉴스 채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주제어: 미디어 외교, 프로파간다, 24시간 뉴스채널, 정보전쟁, 국제뉴스, 국제정보질서, 소프트 파워, Korea 24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전쟁의 최초 희생자는 진실이라는 말이 있다. 냉전이 지속되는 동안 많은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프로파간다에 의해 분열되고, 대립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미국을 비롯해 강대국이 은밀하게 집행한 쿠데타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전복된 경우도 많았고, 주권국가에 대한 강대국의 불법적 침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침략을 당한’ 국가를 비난하는 모순도 반복되었다. 한때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던 이라크와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1990년 제1차 걸프전을 계기로 ‘공공의 적’이 되었고, ‘자유의 투사’로 추앙받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도 2002년 전쟁 이후 ‘테러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꿈꾸던 많은 중동,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강대국의 프로파간다 공세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자국의 억울함을 국제사회로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했다. 1970년대 말 ‘신국제정보질서(New International Information Order, NIIO)’ 운동에서 제기한 ‘일방적 정보의 흐름’이라는 문제도 국제사회의 현안(agenda) 선정 및 여론 형성에 있어 강대국이

* 이 논문은 2011년 한국언론학회 봄철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 대구대학교 전임강사(visionofsea@daegu.ac.kr), 제1저자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박사과정(ssamba304@yonsei.ac.kr), 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석사과정(ok2jh@hanmail.net)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석사과정(ppgblossom@naver.com)

누리는 이러한 구조적 특권과 무관하지 않았다(김승수, 2000; 김은규, 2005). 그러나 당시 NIIO에서 제안되었던 개혁 조치는 남미에 몰아닥친 외채위기와 미국과 영국 등의 방해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1990년 제1차 걸프전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위성방송이 출현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정보 주도권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1991년 이후 미국의 CNN은 지구촌 전체를 관통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방송이 되었고, 1993년에는 영국의 BBC도 그 뒤를 따랐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가 누리던 정보의 독과점 체제가 변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위성방송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CNN의 성공을 모방해 24시간 뉴스 채널이 급증했다. 중동의 작은 나라 카타르의 재정적 지원으로 ‘중동의 BBC’로 알려진 알 자지라(Al Jazeera)와 중국의 영어방송인 CCTV-9 등이 1999년 각각 출범했다. 2001년 미국의 9·11 사건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등이 발발하면서 아랍권에서 알자지라의 영향력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에 대항해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아랍어 방송을 확대했다. 24시간 뉴스 채널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동의’(hearts & minds)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아랍권을 시작으로 글로벌 전체로 확대되었고, 남미의 텔레수르(Telesur), 프랑스의 France 24, 러시아의 Russia Today, 카타르의 Al Jazeera English 등이 이런 배경에서 출범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정보 지형은 크게 변했다. 로이터, AP, AFP 등이 주도하던 국제뉴스 시장에 CNN, BBC, 블룸버그, CNBC, Fox 등 다양한 경쟁자가 등장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됨에 따라 정부의 정보 독점과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트위터(Twitter), 아이패드(Ipad)와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 전체로 이를 전달하는 길도 열렸다. 그러나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채널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대안시각이 존재하지만 국제 위성방송과 권위자의 영향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용 가능한 정보가 많아질수록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정보풍요의 역설’(dilemma of information plenitude)도 확산되고 있다. 정보 전쟁에서 뒤진 일부 국가는 이에 따라 24시간 영어뉴스 채널을 만들어 막대한 규모의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자국에 유리한 의제(agenda) 설정은 물론 자국의 관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1년 리비아 사태는 이런 상황에서 발발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은 분열되어 있고, 각국은 자국의 대표 매체를 통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여론’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리비아 사태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다양하다.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과 독일은 리비아의 문제는 리비아 국민이 직접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행금지구역(NFZ) 설정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인위적 개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지중해연합 등을 통해 북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렸던 프랑스는 이번 개입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영국과 미국도 이번 기회를 통해 ‘서방’¹⁾에 비판적이었던 무함마르 알 카다피를 제거하고자 했다. 대부분 왕족이 지배하는 국가들

1) 서방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서방은 서유럽의 자유주의국가(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유럽 사회국가들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미국과 유럽의 자유주의 국가를 가리키기도 한다. 서방이라는 표현이 다의적인 의미를 갖고, 오늘날 ‘서방’의 의미가 모호해졌다는 점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서방’이라고 표현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유럽과 북미국가들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 이루어진 아랍동맹(Arab League) 역시 프랑스와 영국 등과 같이 비행금지구역(NEZ)에 참가하는 한편, 리비아 반군에 대한 재정지원과 군사훈련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카타르 정부는 리비아의 정권 교체에 가장 앞장서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알 자지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리비아 사태는 24시간 영어뉴스 채널이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선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언론을 통한 ‘정보전쟁’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즉 2011년 3월 2일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상원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정보전쟁 중이며 그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고 했던 주장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리비아 사태의 주요 이해당사국을 우선 선정한 다음, 이들 국가의 대표적인 24시간 영어뉴스 채널의 리비아사태 보도 분석을 통해 각국의 대표적인 뉴스채널과 이들이 소속된 국가의 대외정책간 상관성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전쟁’의 실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언론과 정부의 관계

언론과 정부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이에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단순히 대립적이거나 어느 한쪽의 우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파악하기보다 오히려 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언론과 정부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관계는 상호적 관계(mutual relationship)를 전제하는 모델로 제시된다. 로네버거(Ronneberger)는 상호의존모델을 통해서 정치체계와 언론체계가 그 존립과 유지를 위해 상호적인 기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한다(최경진, 2003에서 재인용). 이와 유사하게 상호공생 모델은 언론과 정치가 상호 타협하면서 공존한다고 설명한다(Sarcinelli, 1987). 여기서 말하는 공생은 물론 상호의존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상호간의 독자적인 존립기반을 인정한다. 이에 반해 상호침투 모델은 정치는 언론을, 언론은 정치를 도구화함으로써 자신의 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한다는 입장이다(최용주, 1996). 이와 유사하게, 오펜퍼(O’Heffernan, P., 1994)이 말하는 상호이용모델(mutual exploitation mode)은 상호공생적 관계에 방점을 찍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통제하는 역동적 생태 시스템을 강조한다. 이 점에서 상호이용모델은 상호침투모델과 용어상 다를 뿐 보다 유사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델들은 현대사회에서 정부와 언론의 역동적인 관계를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에 단순한 언론 우위 혹은 정치권력 우위로 언론과 정부 관계를 단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유재천과 이민웅(1994) 또한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때로 적대, 때로 유착, 때로 견제, 때로 공생, 때로 일체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가질 수 있다.

언론의 자율성 측면에서 보자면, 언론이 정치엘리트, 정부관료, 자본과 같은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언론과 정부 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언론의 자율성을

지위에 있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한 자유주의 강대국들을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입장으로서는 언론을 제4부(fourth estate)로 바라보는 모델은 언론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여기서 언론은 지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김성해, 2006). 그러나 이러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베넷(Bennett, 1986, 1994)이 지적하는 것처럼 언론의 정부에 대한 비판은 지배 엘리트 간의 논쟁과 합의의 정도에 그 범위가 결정되기도 한다. 언론은 지배 엘리트 간의 의견 일치가 있을 때, 즉 합의 영역(sphere of consensus)이 존재할 때에는 합의된 가치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저널리스트들은 관료와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적 정보를 찾고, 풀뿌리 영역의 정보원들과 접촉하게 된다. 언론을 일종의 중재자(mediator)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가령, 갠스(Gans, 1979)는 언론을 국가 권력의 정보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중재자로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론은 국가나 자본에 종속되거나 상대적 자율성의 외피 속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기구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자율성을 가진다. 이러한 입장은 또한 매스미디어를 정부행위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주체이자 감시견(watchdog)으로 바라본다.

미디어 사회학의 관점에서 언론과 정부의 관계는 소스에 대한 의존에 따라서도 구분된다(김영옥, 2005). 언론과 정부 관계는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시각과 비판적 혹은 급진적 미디어 사회학의 시각에 의해서 구분되는데,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시각은 언론이 정부, 정치엘리트와 같은 소스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의 집중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는(Schudson, 1991) 반면, 비판적이고 급진적인 미디어 사회학의 시각은 언론이 정부와 같은 소스에 의존하며, 사회적 힘을 가진 집단에 의해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입장을 가진다(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 1985). 후자의 관점에서 미디어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알튀세르(Althusser, 1971)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미디어는 국가권력을 대신하여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재생산을 담당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로서 간주되기도 한다. 물론, 언론과 정부 관계에서 알튀세르의 관점은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로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미디어의 상대적 자율성을 허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기존 권력관계의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허먼과 촘스키의 선전 모델(propaganda model)은 언론과 정부, 언론과 시장의 관계를 설명한다. 프로파간다 모델은 자본가 계급의 미디어 소유로 인해 언론은 국가와 더불어 언론으로부터도 통제를 받고 있고,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다기보다 국가와 자본의 이해관계를 도모하게 된다고 말한다. 특히 이들 연구자들은 미국의 주류 미디어들이 자국 정부의 대외정책(foreign policy)에 대한 국민의 동의(consent)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왔다고 비판한다(Herman & Chomsky, 1989, 2002). 이들의 논의는 대자본에 지배된 주류 미디어가 국가는 물론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을 폭로한다(김승수, 2000). 일찍이 알츨(Altschull, 1984)이 지적한 것처럼, 언론은 권력의 대리인으로서 사회 내의 엘리트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때문에 언론은 특정 권력을 지지하려는 성향을 가지며, 이를 통해 권력을 대리하게 된다. 그러나 언론과 정부의 관계는 정부의 성향, 언론이 처한 역사적·환경적 맥락, 특수성, 언론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윤영철, 2000). 결론적으로 국가와 언론의 관계는 국가와 언론이 처한 사회역사적 맥락, 언론과 정부의 각각의 성격, 해당 국가의 미디어 정책과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해될 필요가 있다.

2) 전쟁보도, 국가, 그리고 언론

특정한 맥락 안에서 정부와 언론 관계는 사회·역사·문화적 환경 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경향을 가지기도 한다.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 걸린 대외정책의 추진이나 전쟁과 지역분쟁의 발발과 같은 상황이 대표적이다. 언론과 국가이익의 관계는 특히 군사 분쟁, 인질 사태, 정치적 위기, 국제협약 등과 같은 이슈에서 두드러진다(이창호, 2004; Diskson, 1994; Dimitrova & Stromback, 2005; Hallin, 1986; Jachobs & Shapiro, 2000).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은 관료와 국가를 옹호하고, 국민적 합의를 요청함으로써 국민들을 국가로 결집(rally round the flag)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할린과 기틀린(Hallin & Gitlin, 1993)의 연구는 걸프전 당시 미국의 네트워크 방송은 물론 지역뉴스까지 미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미국 내 전쟁지지 여론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할린의 연구(Hallin, 1986)는 미국 주류 미디어들이 베트남 전쟁을 서구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게릴라의 대립으로 묘사함으로써 베트남의 농민 문제와 민족주의 혁명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호킨스(Hoskins, 2004) 또한 두 번의 이라크 전쟁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사건을 단순화하고 왜곡했음을 지적한다. 그 밖의 많은 걸프전 연구들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전쟁 주도 국가들의 미디어들이 씨엔엔과 같은 ‘서방’ 미디어에 의존하는 가운데 애국주의에 매몰되었고, 연합군의 전투 활동을 미화했으며, 이라크 민간에 대해 소홀한 하였음을 지적한다(Corcoran, 1992; Nain, 1992; Shaw & Carr-Hill, 1992; Sainath, 1992). 미국 주류 미디어들은 미국 대외정책의 취지와 목적, 중장기적 대외전략의 역사가 문제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미국의 국익과 대외정책에 깊이 관여하게 됐다(이창호, 2005).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미디어가 국익을 기계적으로 추종한다는 결론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선전 모델과 같은 설명은 언론이 처한 구조적 환경과 복잡한 맥락을 간과하기 쉽다. 때문에 촘스키의 선전 모델은 복잡한 국제정세를 과도하게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윤영철, 2002). 전쟁이나 테러 현장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현실에서 글로벌 미디어들조차 때로 취재 현장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공식적 취재원에 대한 의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때문에 전쟁과 같이 노골적인 대외정책이 실제 수행되는 현장에서 국익과 언론의 문제,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과 상황적 맥락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냉전시대 반공주의(anti-communism) 이데올로기는 미디어가 국제 이슈를 보도할 때 미디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했지만(Hallin, 1986; Herman & Chomsky, 1988), 오늘날 냉전 이데올로기가 각국 대외정책에 관한 언론 보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절대적인 결정 요인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익을 둘러싸고 우리(us)와 적으로서의 그들(them)을 가르는 보도 행태가 존재한다. 이에 미디어는 자국과 적대적인 국가의 희생자에게는 가치를 부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희생자들은 가치 없는 희생자(unworthy victims)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리브스(Liebes, 1992)는 자국이 수행하거나 개입하는 전쟁과 타국 간의 전쟁을 다루는 언론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적대국의 지도자는 빈번하게 ‘악의 산’이나 ‘히틀러’로 묘사된다. 저널리스트들은 또한 자국이 전쟁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을 때 객관성과 중립성보다 오히려 당파성을 수용하는 경향을 갖는다(Carruthers, 2000).

결론적으로 국가 간에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은 어떤 대외정책보다 더욱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익’의 실천으로 간주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랜 기간 군사정책은 홍보, 심리전과 같은 선전 양식을 수반했

다(Louw, 2003). 전쟁 보도에서 미디어들은 국익을 우선한다. 이러한 행태들은 전통적으로 전쟁 수단으로서의 심리전과 같은 하나의 선전(propaganda) 기제로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선전이 작동하는 형식과 체계는 매우 달라졌다. 그렇다면, 오늘날 국가와 미디어의 관계 사이에서 ‘선전’과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새로운 실천 형식은 무엇인가?

3) 선전(propaganda)과 미디어 외교²⁾

영국 외무성(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에 따르면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해외의 민간인 및 기관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정부의 중장기적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영국에 대한 이해와 영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적국을 대상으로 일방으로 진행되는 프로파간다와 달리 미디어 외교는 상대국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설득하는 것을 포함한다(McDowell, 2008). 나아가, 공공외교는 자국의 장기적 목표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국가이익의 실현보다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집중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전통외교와 달리 ‘신뢰하는 동반자’ 구축과 국제사회의 인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평화, 인권, 경제발전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전통 외교와 구분된다. 요컨대, 공공외교는 “국제사회 대중의 요구를 이해하고, 자국의 관점을 제시하고, 자국과 국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고, 국제사회의 공통된 대의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키우는 일”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Leonard, 2002).

전통적 외교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는 주로 정부가 결정했고, 미디어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데 머물렀다. 소수의 정책담당자들이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적 개입이나 무역협상 등을 결정하는 미디어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또 국가 간 힘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디어를 통해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었다. 더구나 정치가와 외교관들이 국제 프로파간다를 위해 TV를 사용하고, 결국 이것이 국내 프로파간다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 부족했다. 공공외교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미디어가 외교에 활용된 역사적 경험도 이를 잘 보여준다.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없거나, 분쟁 해결에 대한 제안이나 협상 조건에 대해 이해 쌍방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또는 정부기관들이 경쟁 국가의 리더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미디어가 활용된다(Burns, 1996). 때때로 심각한 국제 분쟁시기에도 미디어는 양 경쟁국의 주체들 사이에 분쟁 해결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유일한 채널로 사용된다. 한 예로, 1979~1981년의 이란 인질 위기가 발발한 직후 미국은 언론을 통해 대사관에 있는 이란 대학생들과 소통했다(Larson, 1986; Newsom, 1988, p. 56). 1985년 베이루트(Beirut)로 가는 미국의 TWA 제트여객기가 납치되었을 때도 미디어 협상이 진행된 적이 있다(O’Heffernan, 1991, 49쪽). 또한 정부 관료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통 외교채널 대신 글로벌 매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1990~1991년 제1차 걸프전 당시, 미국 정부는 CNN을 통해 미국의 최후통첩을 이라크에 전달했다(Neuman, 1996, 2쪽).

2) 이 장의 내용은 김성혜·강국진의 『국가의 품격과 저널리즘 외교』의 내용 중 일부를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재편집한 것임을 밝힙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평화 협상을 달성하기 위해 신뢰를 축적하는 단계에서도 미디어의 활용도는 높다. 가령, 1994년 9월 시리아의 외무수상 알 샤라(Farouh al-Shara)는 런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기자가 한 질문에 처음으로 답했고, 이후 이스라엘 TV에도 출연했다(Rabinovich, 1998). 또 다른 형태로 미디어가 외교에 활용된 사례는 1973~1974년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가 중동에서 했던 “셔틀 외교 (shuttle diplomacy)”가 있다. 당시 키신저는 중동으로 가는 비행기에 CBS의 마틴 칼브(Marvin Kalb), ABC의 테드 코펠(Ted Koppel), NBC의 리처드 발레리아니(Richard Valeriani)와 같은 유명한 해외 특파원을 동행했다. 이스라엘과 아랍 지도자들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고 교착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사례다(Kalb & Kalb, 1974; Valeriani, 1979). 미디어 외교의 최대 성과라 볼 수 있는 것은 미디어 이벤트를 통해 전쟁과 반감을 극복하고 그것을 평화로 바꾸어 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Dayan & Katz, 1992).

국가 현안의 우선순위 결정, 우호 여론 획득 및 국제사회의 동참을 얻는 데 있어 미디어의 역할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과거와 달리 정부가 특정한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는 이미 개입하고 있으며, 정부는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론을 살피고, 미디어가 전달하는 여론의 방향에 따라 정책을 수정한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정책의 중요성이나 목적을 홍보할 수 없는 미디어정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미디어는 또 정부의 정책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심훈, 2004; 이창호, 2004).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이나 인식, 그리고 집단적 의견(여론)은 따라서 미디어의 중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디어는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미디어가 제시하는 인식 틀(frame)과 평가기준에 따라 국민들의 반응도 달라진다.

냉전 시기 동안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군사적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었다. 군사력과 경제력의 크기를 통해 국제관계가 좌우되던 시기에 정부의 관심은 경제발전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다. 또 국민의 정치 참여 수준이 낮고 정부의 지도력이 인정될 때 정부가 미디어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가이익은 보다 다양해졌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무장한 글로벌 공중의 등장으로 인해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 ‘강제하는 힘’은 별 효과가 없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라크 국민들은 물론 아랍세계의 ‘공감과 이해’를 먼저 얻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의 도래로 인해 더 이상 국내와 국제사회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국내 미디어가 보도한 내용은 외신을 타고 곧 바로 국제사회로 전달되고, 국제사회의 반응도 각종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정부의 외교정책은 이에 따라 외교관을 통한 정보만이 아니라 국내외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상대국 정부에 관한 정보와 국민의 동향에도 영향을 받는다. 국내 미디어가 크게 다루지 않은 특정 정책이 외국 언론에 의해 부각되고 그것이 다시 국내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에 대한 탈레반의 경고가 여기에 해당하며, 한국 정부는 국내의 언론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변호해야 했다. 즉 과거에 미디어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된 것과 달리 오늘날 국가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미디어는 가장 중요한 참여자들 가운데 한명으로 참가한다. 특히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호적 여론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며, 최근의 연구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Cherribi, 2009; Esser, 2009; Graber, 2009; Robinson, Goddard & Parry, 2009).

특정 국가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정체성 형성에 있어 미디어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Gitlin, 2003).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 베네수엘라 등이 막대한 돈과 인력을 투자해 24시간 영어뉴스

채널을 출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BBC와 CNN과 같은 글로벌방송을 포함해 인터넷에 존재하는 무수한 미디어가 비교적 ‘자유적’이고 ‘독립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미디어외교가 강조되는 이유다. 과거 미디어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했고, 미디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거대미디어 그룹이 등장했고, 블로거와 인터넷 일기 등의 1인 미디어도 무수히 생겨났다. 각국 정부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들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고 유통되는 담론과 경쟁해야 하며, 스스로 미디어가 되거나 기존 미디어들과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알 자지라의 성공을 모방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알 후라(Al Hurra)를, 사우디아라비아는 알 아라비아(Al Arabiya)를, 레비논은 레비논방송(The Lebanese Broadcasting Corporation)을 잇달아 설립했다(김남두, 2007; 김성해, 2011).

북한의 핵문제와 같이 특정 국가의 대외정책이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 외국 언론의 보도는 주로 자국의 공식 입장을 따라간다. 그러나 국가이익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은 많은 상황에서 외신은 자사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보도를 한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월스트리트저널(WJS)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서 ‘자본자유화’는 당연한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며, 일부 국가의 자본통제는 부정적으로 보도된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관점도 정반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의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각종 담론을 감시하고, 대항담론을 개발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내보내야 하는 새로운 게임을 하고 있다. 한 예로, 영국 블레어 정부는 공보수석 캠벨(Alastair Campbell)의 주도로 수상 직속 공보실을 마련하는 한편, 로비브리핑 문건을 각 부처에 회람시켜 중앙의 정치노선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정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의 형태와 시기를 공보실이 직접 관리했다.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종합홍보실(GICS)이나 미국의 ‘Office of Global Communications’은 모두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공감과 동의’를 얻기 위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미디어외교와 프로파간다는 닮은 점이 있다. 프로파간다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미디어외교라는 색다른 용어를 사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미디어 외교를 정부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PR 로비, 진실 프로파간다, 또는 은밀한 프로파간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미국 터프츠 대학(Tufts University)내 플레처스쿨(Fletcher School)을 설립했던 에드먼드 걸리온(Edmond Gullion) 역시 “최고의 프로파간다는 진실이고 최악은 거짓이다. 남들을 설득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상대가 우리를 믿도록 해야 하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McDowell, 2008, 50쪽). 그러나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정보 또는 윤색정보(disinformation)를 적극 활용하는 프로파간다와 진실성(honesty)과 공정성(impartiality)을 통해 합리적 설득에 주력하는 미디어외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Leonard, 2002).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모든 정보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다양한 채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일방적인 관점이나 생각을 강요하거나, 대안적인 시각을 차단함으로써 작동하는 프로파간다의 효과도 크게 줄었다. 국제사회는 이에 따라 프로파간다를 대신해 미디어외교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24시간 위성방송이나 영어에 특화된 뉴스 채널 등은 이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4) 24시간 뉴스채널

이상의 배경에서 미디어 선진국들은 뉴스 채널의 육성 및 지원을 국가 미디어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다뤄 왔다. 뉴스생산능력 제고와 국제 경쟁력 강화는 텔레비전 뉴스채널의 주된 정책적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Syvvertsen, 2004; Salomon, 2006; Ofcom, 2006, FCC, 2006). 한국 또한 연합뉴스와 같은 국가 대표 통신사를 육성·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으며, YTN이나 MBN과 같은 방송뉴스채널 또한 종합뉴스채널 및 전문뉴스채널로 각각 방송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뉴스전문채널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채널들은 국가별로 상이한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 자유시장 모델이 강하다. 뉴스채널 또한 CNN, Fox News Channel, MSNBC 등 민영 24시간 뉴스 채널들이 있고, 여기에 지역 로컬의 방송 채널 또한 존재한다. BFMTV와 Canal +가 개국한 뉴스채널은 민영 뉴스채널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면 공영 자본과 민영 자본이 함께 투자한 France24는 24시간 국제뉴스 채널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공민영 방식의 모델로 24시간 뉴스채널들이 편재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의 뉴스채널 정책 또한 지역뉴스채널만이 아니라 글로벌 뉴스채널 시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된 바 있다(최영재, 2008).

물론 24시간 뉴스채널 육성이 무조건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미디어 외교와 이를 통한 국익의 실천이라는 문제의식은 필연적으로 ‘국익’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저널리즘 측면에서 24시간 뉴스 채널은 부정적인 측면도 야기할 수 있다. 가령, 24시간 뉴스채널의 도래는 24시간 방송 시간을 채우기 위해 때로 루머와 같은 정확하지 않거나 의심적은 정보들의 유통 공간을 확보해주었다는 측면에서 비판받기도 한다(Lewis, Cushion, & Thomas, 2005). 글로벌 뉴스채널은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서방’ 일방의 입장과 관점을 24시간 세계 어디로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는 기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도 있다. 정책적 목적과 여기에 보태진 미디어 시장 규모 확장을 위해 종종 뉴스채널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지만, 미국의 Fox뉴스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편향적 의견만을 확대·재생산하는 저널리즘으로 인해 여론의 품격은 더욱 낮아질 수도 있다. 기실 24시간 뉴스(채널)이 끊임없는 미디어 뉴스 사이클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점(White, 2004)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뉴스채널은 단순한 사실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기 위해서 또한 가능한 객관적으로 보도한다는 지령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은 또한 뉴스채널 혹은 통신사들이 수행하는 저널리즘의 한계를 낳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이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 과거와 같은 노골적이고 단기적인 국익 추구를 위한 ‘선전’ 매체로서가 아닌 ‘미디어 외교’로서의 글로벌 뉴스채널에 주목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언론의 주된 역할은 자국의 대외정책을 옹호하고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적군의 사기를 낮추고 동조세력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정한 사건은 보도하면서 다른 사건은 보도하지 않거나, 특정한 관점은 강조하고 대안적

관점은 축소하거나, 특정한 정보원에는 권위를 부여하면서 다른 정보원의 신뢰도는 폄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전략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각국 뉴스채널들이 ‘리비아 사태’를 다루는 방식이 자국의 대 리비아 정책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언론이 정보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문제 1: 뉴스채널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는 자국의 대외정책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뉴스채널들이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보원은 누구이며, 자국의 대외정책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연구문제 3: 관련 주제에 대한 뉴스채널들의 보도 태도는 자국의 대외정책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연구문제 4: 리비아 사태의 1차적 책임자 및 해결책 제시에 있어 뉴스채널들은 자국의 대외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5: 자국의 공식적인 대외정책은 뉴스채널들이 채택하고 있는 프레임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4. 분석 사례,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1) 분석사례: 2011년 리비아 사태와 각국별 입장

유엔(UN) 안보리 결의안 1973호는 2011년 3월 17일 통과되었다. 유엔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을 했고, 미국, 영국과 프랑스는 찬성을 했다. 비토권이 없는 10개의 안보리 회원국 중에서 독일, 브라질과 인도 역시 기권을 했다. 리비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금지 구역설정(No Fly Zone)을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all the necessary means)를 허용한 이 결의안 직후 프랑스를 시작으로 미국과 영국 등이 리비아의 군사시설 및 정부군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NFZ는 이라크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이어 역사상 세 번째로 그 효과는 물론 향후 리비아에 미래에 대한 많은 의문 속에 진행되었다.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불기 시작한 아랍 민주화 바람이 리비아로 확산된 것은 2011년 1월 무렵이었다. 리비아 반정부 시위는 2월 15일 벵가지(Benghazi)에서 시작되었으며, 인권운동가 파티 터빌(Fathi Terbil) 체포에 항의하던 약 40명의 시민들이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틀 후 2월 17일 리비아 반정부 국가회의는 ‘혁명의 날’(Day of Revolt)을 선언했고, 곧 이어 대량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내전이 발발했다. 무장 봉기가 시작된 직후 일군의 리비아 고위 관료들이 카다피 정부에 등을 돌렸고, 전직 법무장관이었던 모하메드 제레일(Mohamed Jeleil) 등은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2월 27일 벵가지에서 ‘국가과도위원회’(National Transitional Council)를 구성했다. 그러나 한때 카다피 정부의 심장부인 수도 트리폴리(Tripoli)까지 위협했던 반군의 위세는 리비아 정부군의 반격으로 급속히 위축되었고, 프랑스, 영국, 미국, 아랍리그 등은 ‘인본주의적 위기’(humanitarian crisis)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리비아에 대한 무력행사에 나섰다.

공습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서방국가들은 카다피의 퇴진을 압박하는 한편, ‘리비아 연락그룹’(Libya Contact Group)을 구성해 반군에 대한 재정지원 등 추가 수단을 찾고 있다. 공습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사태는 보다 장기화되고 있으며, 4월 19일 영국과 프랑스 등은 소수의 군사전문가를 반군 지역으로 파견해 군사 훈련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to People) 독트린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이번 개입은 지난 1999년 코소보 사태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권불가침의 원칙을 밝힌 유엔헌장에도 배치됨은 물론, 강대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러시아, 중국과 브라질 등은 트리폴리 수도의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나토 공습은 이미 유엔 결의안의 범위를 넘어섰고, 군사고문관 및 지상군의 파견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신속한 개입은 평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예멘과 바레인과 뚜렷이 대비되는 것으로 리비아의 석유를 노린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는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리비아 과도 정부를 가장 먼저 승인한 카타르를 포함해, 바레인,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왕정으로 공통적으로 미국의 군사기지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2011년 8월 현재 리비아 사태는 반군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까지 진격함으로써 반군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각국별 입장은 달랐다. 초기에 가장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 국가는 바로 러시아였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3월 21일 언론을 통해 “러시아는 어떤 조건에서도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면 러시아가 기꺼이 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번 사태에 대한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명백히 반대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조건하에 반군을 지원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리비아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중국은 ‘인권보다 주권’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서방과 서방의 리비아 제재를 묵인하는 국제여론을 비판하였다(환구시보, 2011/3/23일자). 중국은 러시아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 리비아 사태가 반군의 승리로 마무리된 이후에도 중국은 리비아 사태의 본질은 ‘서방의 흥계에 의한 주권국의 붕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리비아 반군에 대한 서방 국가의 지원과 석유 이권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했다(환구시보, 2011/8/23일자). 독일은 카다피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군사개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유럽연합 외무회의를 통해 “군사개입을 주저한 이유는 충분하다. 벌써 아랍연맹이 비난에 나서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군사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전통적으로 중동에 대한 강한 개입주의 정책을 유지했던 미국은 리비아 사태에서 정책적 변화를 보였다. 러시아와 독일과 달리 영국, 프랑스, 미국은 무력개입을 수행하는 연합군을 주도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입장 차이는 있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군사개입을 지지하였으나, 리비아 주민 보호라는 원칙에 보다 충실하고자 했다. 즉 리비아 군사 개입을 지원하지만 미국이 아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했고, 리비아 반군을 공식적인 국가기구로 인정하는 데도 서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중앙정보부(CIA) 등을 통해 리비아 반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은 자국 언론을 통해 폭로된 바 있다(뉴욕타임즈, 2011/3/31일자).

프랑스는 사태 초기부터 카다피 축출을 위해 연합군 구성 및 군사작전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연합군의 리비아 미사일 공격 또한 프랑스 공군 전투기의 리비아 영공 진입 후 시작됐다. 카타르의 경우 중동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가 이러한 ‘적극적 개입’ 정책을 채택한 이유는 우선 그간 프랑스가 유럽과 북아프리카 등 유럽·아프리카 지역의 연합 구축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했던 대외정책 노선의 연장선상으로 평가되

고 있다. 카타르의 경우, 1969년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국이 시행된 뒤부터 줄곧 카다피를 반대해 왔다. 카타르 왕실 소유의 알 자지라 방송 또한 연합군의 군사작전의 명분과 정당성을 적극 보도함으로써, 카타르 왕정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반 자셈 카타르 총리는 알 자지라를 통해 “이번 임무에 아랍국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Al Jazeera, 2011/3/19일자).

이번 사태를 유럽과 아프리카/중동의 지역 정세와 원유 문제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 뉴욕타임즈는 리비아 원유를 둘러싸기 위한 각축전이라는 표현을 통해 리비아 사태 배후에 에너지 전쟁의 이면을 강조했다(뉴욕타임즈, 2011/08/22). 실제 프랑스, 영국 등은 리비아 사태가 반군의 승리가 점쳐지는 가운데 리비아 과도정부와 에너지 관련 협의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반면, 리비아 반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던 러시아와 중국은 난처한 입장에 처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선일보, 2011/8/24일자).

리비아 사태에서 또한 주목할 부분은 여타 중동의 분쟁과 달리 리비아 사태가 초기에 이른바 ‘서방’ 국가들이 미리 예측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사태였다는 점에 있다. 이는 걸프전쟁, 아프카니스탄 분쟁과 같은 서구 주도형이벤트들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리비아 사태 보도에서 글로벌 뉴스 채널들과 언론 보도의 관계가 어떤 양상을 보였고,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2)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1)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리비아 사태를 둘러싼 정보 전쟁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특정한 관점에 부합하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우호적인 정보원을 전략적으로 인용하고, 과거로부터 형성된 선입관에 부합하는 사건을 부각함으로써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리비아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와 그 국가들의 주요 매체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보도와 대외정책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이들 국가들의 24시간 주요뉴스채널이 영문(English)으로 서비스하는 리비아 관련 뉴스에 대한 내용분석을 시행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은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카타르에서 영어로 24시간 뉴스서비스를 전담하는 뉴스채널들을 포함시켰다. 분석대상 뉴스채널 선정을 위해서 미국과 영국은 국제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방’ 국가라는 점을 고려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지정학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유럽 내에서 리비아 사태 개입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했다. 독일 및 러시아는 리비아 개입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국가라는 점을, 그리고 카타르는 같은 아랍권이면서도 ‘서방’의 리비아 개입을 지지하는 국가라는 차별성을 고려했다. 자료수집의 경우, 2011년 2월부터 촉발된 리비아 사태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기사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리비아 사태가 발생한 2월 15일부터 공습이 진행된 후 1주일인 지난 3월 26일까지 각 뉴스채널이 보도한 기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기사는 각 뉴스채널의 웹사이트 상에서 수집했다. 벵가지 시위 이후 이번 사태에 몇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기간을 다시 다섯 시기로 구분했다. 각 시기별로 최대 20개의 기사를 할당표집 방식으로 표본 추출했다. 시기별 표본의 대표성 및 개별 기사가 표본에 포함되는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매체의 기자 또는 특파원이 직접 쓴 기사, 분석 및 해설기사, 사설 및 칼럼, 그리고 리비아 사태와

상관성이 높은 기사를 우선해서 표본을 확정했다.³⁾ 제1기(2월 15~21일)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리비아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에 나서 기간이며, 제2기(22일~3월 1일)는 카다피 정부가 궁지에 몰리면서 반군이 리비아 전역을 장악했던 시기다. 제3기(3월 2~16일)는 리비아 정부가 반격에 나서 반군이 벵가지로 후퇴한 시기였고, 제4기(3월 17~18일)는 벵가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논의가 시작되고 비행금지구역(NFZ) 설정이 확정된 시점이었다. 마지막으로, 나토의 공습이 시작되고 리비아 사태가 장기국면에 돌입한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를 제5기로 선정했다. 코딩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학생(석사) 3명이 했으며, 플레이스(Fleiss)의 카파(Kappa) 계수⁴⁾로 확인한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는 0.8 이상으로 분석 결과의 신뢰도에 큰 무리가 없었다. <표 1>은 최종 분석된 표본 구성을 보여준다.⁵⁾

<표 1> 표본 구성 (단위: 건)

매체/시기	1기	2기	3기	4기	5기	합계
알자지라 (Al Jazeera)	20	19	19	10	18	86
비비씨 월드 (BBC World)	20	20	20	20	20	100
씨엔엔 인터내셔널 (CNN International)	20	20	20	20	20	100
도이치 벨레 (Deutsche Welle)	4	16	20	8	20	68
프랑스24 (France 24)	20	20	20	20	20	100
러시아 투데이 (Russia Today)	5	20	20	11	20	76
합계	89	115	119	89	118	530

(2) 측정 항목의 정의

① 보도 주제

보도 주제(topic)는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보도된 사건, 이슈, 현상을 다룸에 있어서 어떤 행위자에 특히 주목했는지를 중심으로 측정했다. 측정 유목은 리비아정부 및 카다피 측, 리비아 반군, 리비아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 북대서양조약기구 관련, 각국 정부(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독일, 브릭스권(BRICs), 유럽연합, 아랍국가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관련, 리비아와 영국/프랑스의 관계, 리비아와 미국의 관계, 비행금지구역에 관한 뉴스 및 기타 등으로 구성했다.

② 정보원

언론이 특정 이슈를 보도할 때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주된 정보원은 해당 이슈에 관계된 이해당사자

- 3) 가령, 리비아 사태를 언급하면서 다른 국가의 중동 혁명을 기사의 주된 토픽으로 삼는 기사라든가, 해당 뉴스채널에 게재되기는 했으나 다른 매체의 기사인 경우 등은 제외했다.
- 4) 플레이스(Fleiss)의 카파 계수는 확정된 복수의 코더들 간의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두 명의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하는 코헨의 카파(Cohen's Kappa)와 달리 두 명 이상의 코더 간 신뢰도 측정이 가능하다 (Fleiss, 1971).
- 5) 알 자지라의 경우, 기대했던 바와 달리 기사 수가 적었다. 알자지라 영문판 사이트에서 '리비아'를 검색어로 해서 검색한 1차 결과수는 1,000건이 넘었지만, 분석기간 내에 보도되었고,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추린 결과 100건이 되지 않았다. 도이치 벨레 및 러시아 투데이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인해서 표본 수가 적었다.

는 물론 자국의 관료(정보)나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이들은 공식적인 정보원들에 해당하는데, 시걸(Sigal, 1973)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원에는 자국의 관료(정부기관), 외국의 관료(정부), 다른 뉴스조직 등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리비아 사태를 둘러싼 리비아내 주요 행위자들, 그리고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제기구들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은 뉴스에 제시된 권위 있는 의견 제공자(cue giver)로 정의하여 측정했다. 기사에 정보원이 지나치게 많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사의 주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원을 최대 3명까지 기록하도록 했다. 코딩을 위한 조작적 정의를 위해 권위 있는 의견 제공자는 뉴스의 제목, 리드문 등을 통해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 정보 혹은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입장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용된 정보원으로 삼았다. 단순 사실 보도 중에서 여러 정보원들과 그들의 발언을 나열한 기사의 경우 중요한 정보원들의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그 경우 기사의 제목, 발문(lead) 혹은 기사의 문두에 먼저 노출된 정보원을 우선하기로 했다.

③ 보도 태도

각국의 뉴스 채널의 보도가 전쟁 이슈와 같이 자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뉴스채널의 보도는 특정한 논조나 태도를 드러내기 쉽다. 일반적으로, 이슈에 대한 기사의 태도(attitude)는 사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중립적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로 측정할 수 있다. 분석 사례인 리비아 사태의 경우 리비아와 서방의 관계, 리비아와 중동 각국들의 관계, 서방 국가들 내부의 알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가령, 카다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 서도 국제기구를 통한 서방의 개입에는 부정적인 세력도 있다. 때문에 보도태도 측정은 주요 보도 대상(행위자)별로 개별적으로 측정해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카다피에 대한 태도, 리비아 반군(시민군)에 대한 태도, 나토 및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에 대한 태도, ‘서방’의 리비아 개입에 비판적인 진영이었던 독일·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에 대한 태도,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태도, 유엔 결의안 이후 실제 집행된 공습에 대한 태도로 각각 구분했다.

④ 1차적 책임 및 해결책

1차적 책임은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즉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를 말한다. 측정 유목은 카다피와 그 가족들(독재, 테러,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해 온 카다피와 그 일가), 반군(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거나, 중동 민주화 혁명과 달리 무력을 곧바로 앞세운 공세를 폈다는 점), 제국주의 강대국(이라크에서와 같이 석유이권을 노리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무리한 개입), 무책임한 국제사회(리비아 독재와 학살을 방관하는 국제사회), 아랍연맹(자국에서는 권위주의와 독재 정치를 펴는 왕정체제 이면서 대외적으로는 리비아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아랍권 국가들의 이중잣대), 독일·러시아·중국 등 중립적 국가들(유엔결의에서 중립표를 행사하는 기회주의적 태도), 언론(특히, 이번 사태를 악용해 프로파간다에 주력하는 ‘서방’ 및 일부 중동 언론), 알 카에다(리비아 젊은이들을 호도) 및 기타로 구성했다. 해결책은 리비아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된 여러 주장을 의미한다. 측정 유목은 카다피의 망명, 리비아 정부군의 붕괴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 비행금지구역의 효과적인 집행(외국 군대의 진입은 고려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정치·외교적 방안 모색과 국제사회의

노력, 분단국가화(반군과 정부군 간의 국가분리 방안), 단기적 해결책이 없음(NATO와 미국도 물러나기 어렵고, 리비아도 물러나기 어려운 불투명한 상황) 및 기타로 구성했다.

⑤ 프레임

뉴스보도는 인지된 현실에 관해 서로 경쟁하는 입장들 가운데 특정 관점을 선택하고, 다른 관점은 배제한다. 프레임은 뉴스 텍스트 속에서 특정 관점과 입장을 강조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진 ‘관점’(perspective)을 만든다. 각국의 뉴스채널들이 특정한 프레임을 채택했다면 리비아 사태를 정의하고, 인과관계를 따지며, 사태에 대한 평가와 해법 또한 서로 다르게 구성된다. 이러한 프레임 속성들은 하나의 ‘리비아 담론’으로 구성될 수 있다. 리비아 사태에 관한 프레임 분석은 글로벌 뉴스 채널들이 제공하는 ‘리비아 담론’들이 어떤 행위자나 이익의 주체성에 우위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준다(Entman, 1991, 1993). 이를 통해 뉴스채널들의 프레임 구성이 자국의 대외정책 및 이익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프레임 측정을 위해서 표본의 일부를 분석해 귀납적으로 프레임을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된 프레임을 5개의 유목으로 구성했다. 프레임의 측정은 기사의 제목, 리드문, 중요한 정보원의 인용 등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프레임을 해당 기사의 지배적 프레임을 측정했다. 혹은 기사에서 드러나는 전반적 논조나 태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논조나 태도를 뒷받침하는 프레임을 코딩했으며, 단순 사실 보도에서 일부 개별 입장과 관점을 나열하는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기사 제목과 리드문에서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현저한 프레임으로 간주했다. 각각의 프레임은 인도주의적 개입, 주권침해, 침략전쟁, 자업자득, 정치적 목적으로, 각 프레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프레임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 리비아 정부군에 의한 민간인 대량학살에 있고, 따라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개입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NFZ, 공습)이 필요하며, 사태의 해결은 카다피의 망명 혹은 정권교체에 있다고 본다. 이 프레임에 따르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정당한 행위자로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으며,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게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주권침해(infringement of sovereignty) 프레임은 리비아 사태의 본질은 내전(civil wars)이며 반군의 정체성이 민주화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했던 이집트 시위대와는 다르다는 인식하에 리비아 문제는 리비아 국민들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이 프레임에 따르면 나토군의 공습은 민간인 보호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나토군 공습의 의미는 모호하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책을 공습과 같은 무력개입이 아닌 정치·외교적 노력에서 구한다. 셋째, 침략전쟁(aggressive war) 프레임은 사태의 본질을 리비아의 석유 자원에 대한 서방의 개입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동일하게 유혈진압을 한 바레인이나 예멘 등에는 간섭하지 않는 서방이 리비아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적인 침략 전쟁이 된다. 리비아 사태는 본질상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과 다를 바 없으며, 유엔 결의에 따른 공습은 처음부터 카다피 정권을 교체하고 친서방 정권수립을 수립함으로써 리비아 석유자원을 강탈하기 위한 부당한 전쟁이 된다. 넷째, 자업자득(Libya's own misfortunes) 프레임은 리비아 정부에도 잘못이 있고,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이번 사태에 개입하는 ‘국제사회와 서구 선진국들’도 잘못이라는 ‘양비론’적 시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프레임은 내부 통치에 실패하고, 민주화 시위를 무리하게 진압한 리비아 정부에 더 큰 책임을 묻는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목적(political motivation) 프레임은 서방 각국들이 리비아 사태의 본질이나 해결에

중점을 둔다기보다 오히려 리비아 사태를 활용해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시각이다. 예컨대, 이 프레임은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공습에 참가하는 이유를 사르코지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악화를 되돌리려는 자국 내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고 본다.

<표 2> 프레임 진술문

프레임 명칭	주된 프레임 진술문
인도주의 개입	시민들을 공격하는 정권에 대해 우리(‘서방’)는 공격을 멈출 수 있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주권침해	리비아 문제는 리비아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리비아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침략전쟁	리비아에 대한 공습은 서방 식민주의자의 십자군 침략전쟁과 같은...
자업자득	이번 사태는 (무함마르 가다피의) 자업자득이다.
정치적 목적	(리비아 사태는) 사르코지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해줄 좋은 기회...

5. 분석결과 및 해석

1) 뉴스채널의 의제 설정과 자국 대외정책의 관계

언론은 특정한 사건과 주제를 ‘의제’로 부각시키는 한편, 2차 의제설정을 통해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 논란거리, 주장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 국가이익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각국 뉴스채널들도 리비아 사태 이슈 안에서 상이한 주제에 주목함으로써 리비아 사태의 특정 측면은 부각하고 다른 측면은 배제할 수 있다. 뉴스채널들이 미디어 외교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면, 뉴스채널들의 의제설정은 자국의 대외정책과의 상관성을 보일 것이다. <표 3>은 분석대상 뉴스채널들이 어떤 주제에 주목했는지를 보여준다.

<표 3> 주목 주제 (단위: %, 괄호 안은 건)

	씨엔엔	비비씨	러시아 투데이	도이치 벨레	프랑스 24	알 자지라	전체
리비아 정부(국가)	15.2	18.2	8.6	8.1	1.1	1.2	9.1
리비아 반군 관련	14.1	4.0	1.4	4.8	14.0	20.7	10.3
정부군과 반군 교전	10.1	9.1	8.7	9.7	16.1	22.0	12.7
NATO 관련	31.3	33.3	21.7	33.9	31.2	23.2	29.4
미국 정부	20.2	13.1	5.8	3.2	10.8	11.0	11.5
프랑스 정부	0.0	3.0	0.0	1.6	7.5	3.7	2.8
영국 정부	0.0	13.1	0.0	0.0	0.0	1.2	2.8
러시아 정부	0.0	0.0	20.3	0.0	0.0	0.0	2.8
독일 정부	0.0	0.0	0.0	4.8	0.0	0.0	0.6
BRICs 각국 정부	0.0	0.0	0.0	0.0	0.0	0.0	0.0
유럽연합	0.0	0.0	1.4	4.8	8.6	11.0	4.2

아랍국가 관련	4.0	0.0	8.7	6.5	5.4	3.7	4.4
이라크·아프간 관련	0.0	0.0	0.0	0.0	0.0	0.0	0.0
리비아와 영·프 관계	0.0	3.0	0.0	3.2	0.0	0.0	1.0
리비아와 미국 관계	2.0	1.0	2.9	0.0	0.0	0.0	1.0
비행금지구역 문제점	0.0	0.0	11.6	8.1	0.0	1.2	2.8
기타	3.0	2.0	8.7	11.3	5.4	1.2	4.8
전체	100.0 (99)	100.0 (99)	100.0 (69)	100.0 (62)	100.0 (93)	100.0 (82)	100.0 (504)

$\chi^2=344.011$, $df=75$, $p<.001$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미국 매체는 자국 정부에 주목했다. 영국 매체 또한 자국에 관한 이슈를 우선시하면서 동시에 대외정책상 이해관계를 긴밀히 공유하는 미국에 주목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동일한 맥락에서 러시아와 독일은 자국의 입장과 대립하는 미국을 낮게 다루고, 영국에 관해서는 아예 주목하지 않았다. 프랑스24와 알 자지라에 미국에 두자리 수 이상 주목한 반면, 독일 및 러시아와 여타 브릭스권에 대한 주제는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자국의 대외정책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등장하는 이슈에 주목했다.

리비아 반군에 어느 정도 주목해주는지는 각국의 대외정책상 입장과의 관련이 있다. 이를 살펴본 결과, 리비아 반군에 주목하는 정도는 알 자지라(20.7%), 씨엔엔(14.1%), 프랑스24(14.0%)에서 높았던 반면, 러시아와 독일에서는 각각 5%도 채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 이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리비아 개입에 적극 혹은 우호적 국가들과 리비아 개입에 비판 혹은 부정적 국가들의 뉴스채널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뉴스채널들은 리비아와 서방 국가들의 관계를 검토하거나, 이번 사태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사례와 연결해 살펴보려는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 투데이(11.6%)와 도이치 벨레(8.1%)는 비행금지구역의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었고, 다른 4개 매체들보다는 여러 주제들에 고른 주목을 보였다. 또한 러시아 투데이와 독일에서 ‘기타’ 항목이 많이 나온 것은, 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주변국 정부를 다룬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영국·프랑스·카타르의 뉴스채널들과 러시아·독일의 뉴스채널은 서로 다른 의제설정전략의 차이를 집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리비아 사태라는 상징적 공간 안에서 자국의 대외정책에 입각한 상이한 의제설정 전략을 펼치고 있다.

2) 정보원 활용과 자국 대외정책의 관계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뉴스채널들은 자국의 권위자들을 우선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표 4>는 리비아 사태에 대해서 각국 뉴스채널들이 어떤 정보원들을 전략적으로 동원했는지를 보여준다.

<표 4> 정보원 (단위: %, 괄호 안은 건)

	씨엔엔	비비씨	러시아 투데이	도이치 벨레	프랑스 24	알 자지라	전체
카다피와 그 가족	6.5	9.5	9.6	1.3	6.1	10.3	7.5
리비아 정부	2.9	9.5	1.8	7.0	6.6	7.0	6.0
리비아 반군(반정부세력)	9.5	7.4	3.6	9.6	7.9	18.8	9.5
UN	7.3	6.8	9.0	10.2	7.9	10.3	8.3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2.9	2.7	6.0	7.0	4.4	3.8	4.1
프랑스	0.7	4.1	5.4	11.5	17.9	6.1	7.1
영국	10.2	18.6	3.0	3.2	3.9	5.6	8.5
미국	26.9	12.8	18.1	10.2	25.8	12.7	18.3
AL(아랍리그)	1.8	0.3	3.0	2.5	2.6	2.3	1.9
AU(아프리카연합)	0.0	0.0	1.2	1.3	0.0	0.5	0.4
미국 언론	15.3	6.8	0.6	0.6	0.0	1.4	5.0
영국 언론	4.4	17.2	3.6	3.2	0.0	3.3	6.1
프랑스 언론	0.7	1.0	0.0	1.9	2.2	0.5	1.0
중동 언론	1.5	0.7	0.6	0.6	0.0	0.0	0.6
알 자지라	0.4	0.0	3.6	1.9	1.3	16.0	3.5
러시아 언론	0.0	0.0	3.0	0.0	0.0	0.0	0.4
중국 언론	0.0	0.0	0.0	0.6	0.0	0.0	0.1
독일 언론	0.0	0.0	0.0	3.2	0.4	0.0	0.4
리비아 국영방송	0.7	0.0	3.0	0.6	1.3	1.4	1.0
기타	6.2	2.0	9.0	7.6	9.6	0.0	5.4
러시아 정부	0.0	0.0	11.4	0.0	0.4	0.0	1.5
독일 정부	0.0	0.0	0.0	6.4	1.3	0.0	1.0
국제형사재판소(ICC)	2.2	0.7	4.2	9.6	0.4	0.0	2.3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75)	(296)	(166)	(157)	(229)	(213)	(1,336)
자국 정부 + 자국 언론 ⁶⁾	42.2	35.8	14.4	9.6	20.1	18.3	25.9

미국 정보원은 단일 항목으로 가장 높은 비중(18.3%)을 차지했다. 개별 국가 정보원들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영국(8.5%), 프랑스(7.1%)도 함께 높았다. 실제 분석 결과 ‘캐머런 영국총리’, ‘영국 외무부장관’, ‘오바마 미 대통령’, ‘힐러리 미 국무부장관’ 등이 정보원으로 빈번하게 등장했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는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의 정보가 더욱 우대받는 국제뉴스의 기존 관행을 재확인해준다. 하지만 이와 함께 국가별 분석 결과는 뉴스채널이 자국 정보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대외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국 정보원의 활용 비중을 자국 정부와 자국 언론의 활용 빈도의 합(sum)으로 보았을 때, 전체 자국 정보원의 비중은 25.9%로 다른 항목들 가운데 가장 높다. 국가별로 보면 자국 정보원 비중은

6) ‘카타르’는 이번 사태에 관한 언론 보도에 중요하게 다루어질 만큼 국제사회에서 비중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분석 유목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때문에 알 자지라의 경우 ‘자국정부+자국언론’에서 정부를 아랍리그로 간접적으로 연결해 제시했다.

씨엔엔(42.2%), 비비씨(35.8%), 프랑스24(20.1%), 알 자지라(18.3%) 순으로 높았다. 특히 씨엔엔과 비비씨는 자국정부 및 자국언론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것 외에도 상대국(미국은 영국, 영국은 미국) 정부와 언론의 인용에도 적극적이었다. 이 두 국가의 전략적 동맹 관계가 정보원 활용 차원에서도 확인된다. 프랑스 24의 경우는 자국 정보원(20.1%)과 미국 정보원(25.8%)에 크게 의존했다. 프랑스가 리비아 개입에 가장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결과는 뉴스채널들의 보도와 국익의 강한 상관성을 보여준다. 알 자지라는 프랑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원을 구성했다. 알 자지라는 ‘알 자지라’ 스스로를 많이 인용하기도 했지만, 이보다 리비아 관련 정보원들을 더욱 많이 인용했다. 특히 리비아 반군은 18.8%로 정보원 항목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각 정부 정보원에 대한 인용 비중은 전체 평균보다 높지 않았다. 알 자지라의 정보원 구성은 반군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유엔 결의를 지지한 카타르의 대 리비아 정책과 부합했다.

러시아 투데이와 도이치 벨레 또한 뉴스채널 보도와 자국의 정책과의 상관성을 보여준다. 러시아 투데이의 경우 미국 정부 인용 비중은 18.1%로 높았으나, 자국 정보원의 인용 비중은 14.4%에 불과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인용 다음으로 자국 정부를 10% 이상 다룬 것은 결코 적은 비중은 아니었다. 러시아의 정보원 구성의 의미 있는 특징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흩어져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상대적인 정보원의 다양성은 리비아 사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이중적인’ 대처와도 일정한 연관을 보여준다. 러시아에서 ‘기타’가 많았던 것은 실제 분석 내용에 근거해 보면, 이라크, 이집트, 네덜란드 등 주변 정부의 정상들을 정보원으로 다루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러시아 뉴스채널 또한 정보원 활용은 물론 앞선 의제설정 면에서도 러시아 정부의 태도에 부합하고 있다. 독일은 이번 사태에서 군사적 해결을 줄곧 반대하면서 유럽 내 전통적 라이벌 관계인 프랑스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도이치 벨레에서 프랑스의 비중이 높은 것은 프랑스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10.2%)과 나토(7.0%)의 인용 비중은 다른 뉴스채널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독일이 군사개입을 비판하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도이치 벨레가 국제기구들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도이치 벨레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인용 비중이 9.6%나 나온 점도 독일의 대외정책이라는 맥락에서 풀이된다. 역으로 도이치 벨레의 미국정부 및 영국정부 인용 비중은 매체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분석 결과는 뉴스채널들의 정보원 구성이 상당 부분 자국의 대외정책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씨엔엔과 비비씨는 영미권 입장을 전달하는 데 충실했다. 프랑스 24는 미국과 자국의 정보원 활용에 적극적이었다. 알 자지라는 미국·유엔·리비아 반군의 목소리에 권위를 부여 해주었다. 러시아와 도이치 벨레는 상대적으로 영국과 미국에 대해 의존하지 않으면서 유엔과 나토 정보원들도 적극 채택했으며, 아랍과 아프리카 정보원들을 다루었다. 또한 그 절대적인 비중은 낮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를 정보원으로 채택하는 등 상대적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러시아와 독일의 뉴스채널 또한 자국의 대외정책과 보조를 맞췄다고 볼 수 있다.

3) 보도태도와 자국 대외정책의 관계

자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외의 특정한 보도 대상은 자국 미디어에 의해 우호적 존재 혹은 부정적 존재로 재현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카다피, 리비아 반군, 리비아 개입을 주도한 미국·영국·

프랑스, 리비아 개입에 반대한 러시아·독일 및 그 밖의 브릭스 국가들, 유엔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및 공습에 대한 각국 언론의 태도 규정은 자국 대외정책의 맥락 안에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5>부터 <표 9>를 통해서 뉴스채널별 태도를 리비아 사태에 관계된 행위자별로 구분해서 분석했다.

카다피에 대한 태도 분석 결과, 모든 뉴스채널들에서 ‘비판적 태도’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각국 뉴스채널들의 입장과 관점, 나아가 이들이 보도를 통해 재현하는 ‘국가의 태도’가 카다피에 대해 동일한 입장과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국가별로 보면 이러한 차이가 드러난다. 이번 사태에 ‘적극적 개입 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카타르와 프랑스의 두 뉴스채널, 알 자지라와 프랑스 24에서 카다피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80% 이상 압도적이었다. 씨엔엔과 비비씨도 비판적인 태도 전달에 치중했다. 그러나 알 자지라와 프랑스24에 비해 씨엔엔과 비비씨의 ‘중립 태도’의 비중은 훨씬 높았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다. 리비아 개입에 대한 가담 정도와 카다피 비판의 수위에 일정한 상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결과는 초기 리비아 사태를 둘러싼 “서방”과 국제사회의 혼란스러운 시선의 반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반면 러시아 투데이와 도이치 벨레는 카다피에 대해 명확한 태도 규정을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두 매체는 중립적 태도를 40% 내외로 다른 매체들에 비해 가장 높게 채택했다. 또 러시아 투데이는 미약하나마 카다피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6.6%로 가장 많이 채택했다.

<표 5> 카다피에 대한 태도 (단위: %, 괄호 안은 건)

	씨엔엔	비비씨	러시아 투데이	도이치 벨레	프랑스 24	알 자지라	전체
우호적	5.0	2.0	6.6	2.9	2.1	0.0	3.0
중립적	30.0	35.0	46.1	38.2	12.5	7.0	27.4
비판적	65.0	63.0	47.4	58.8	85.4	93.0	69.6
전체	100.0 (100)	100.0 (100)	100.0 (76)	100.0 (68)	100.0 (96)	100.0 (86)	100.0 (526)

$\chi^2=61.167$, $df=10$, $p<.001$

반군에 대한 태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반군에 대한 중립적 태도(50.6%)와 우호적 태도(47.3%)는 매우 높았던 반면, 비판적 태도는 전체 2.1%로 미미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까닭은 반군이 리비아 민주화를 명분으로 삼는 저항 세력으로서의 도덕적 정당성을 국제사회로부터 획득했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자국의 대외정책에 따라 각국 언론들이 실천하는 미디어 외교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가령 러시아 투데이(67.1%)와 도이치 벨레(72.1%)는 반군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우호적 태도 형성은 회피했다. 리비아 반군과 시민들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리비아 개입의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은 당연히 리비아 반군에 대한 우호적 묘사와 부합한다. 가령, 알 자지라는 프랑스와 함께 리비아 반군 위원회를 승인한 카타르 정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반군에 대한 강한 우호적 시선(77.9%)을 보였다. 알 자지라는 실제 보도에서 카다피 정부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순교자’로 다루고, 리비아 사태를 반복적으로 ‘혁명(revolution)’이라는 표현과 연결 시켰다. 물론 프랑스가 중립적 태도(65.2%)를 가장 높게 취한 점은 그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다. 그러나

씨엔엔과 비비씨 또한 반군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50% 이상씩 취함으로써, 반정부 시민들을 보호할 명분을 내세운 자국 정부의 리비아 개입 전략과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반군(반정부세력, 시민군)에 대한 태도 (단위: %, 괄호 안은 건)

	씨엔엔	비비씨	러시아 투데이	도이치 벨레	프랑스 24	알 자지라	전체
우호적	57.0	56.0	26.3	25.0	32.6	77.9	47.3
중립적	41.0	44.0	67.1	72.1	65.2	22.1	50.6
비판적	2.0	0.0	6.6	2.9	2.2	0.0	2.1
전체	100.0 (100)	100.0 (100)	100.0 (76)	100.0 (68)	100.0 (92)	100.0 (86)	100.0 (522)

$\chi^2=81.067$, $df=10$, $p<.001$

리비아 개입과 공습을 주도한 ‘나토 및 미국, 영국, 프랑스’에 대한 뉴스채널들의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자국의 대외정책과 주류 미디어 보도 간의 밀접한 연관을 재확인시켜준다. 프랑스 24와 알 자지라에서 우호적 태도 비중은 각각 78.2%, 68.0%로 높았고, 씨엔엔과 비비씨의 우호적 태도는 앞선 두 매체보다는 낮았지만 50%대를 넘어 가장 높았다. 요컨대 이들 4개 매체는 나토 및 자국을 향한 ‘비판적 태도’는 전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는 뉴스채널 보도가 국익을 둘러싸고 냉정하게 경쟁하는 미디어 외교의 공간임을 짐작케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 투데이에서는 비판적 태도가 66.7%로 높았다. 무력 개입을 앞세운 서방국가들을 비판한 러시아의 입장이 러시아 투데이의 보도 태도에도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반면 도이치 벨레에서는 중립적 태도가 66.2%로 가장 높았던 반면, 나토 및 ‘서방’ 국가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32.4%로 낮았다. 도이치 벨레의 이러한 보도 태도는 비행금지구역 승인을 반대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에 그침으로써 전통적인 ‘서방’ 우방국가들이 아닌 러시아, 중국, 브라질 등과 의견을 같이한 독일의 ‘기회주의’적 혹은 ‘대안적’ 태도와도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다.

<표 7> 나토, 미국, 영국, 프랑스에 대한 태도 (단위: %, 괄호 안은 건)

	씨엔엔	비비씨	러시아 투데이	도이치 벨레	프랑스 24	알 자지라	전체
우호적	58.0	58.0	0.0	1.5	78.2	68.0	41.8
중립적	41.0	42.0	33.3	66.2	20.0	28.0	40.4
비판적	1.0	0.0	66.7	32.4	1.8	4.0	17.7
전체	100.0 (100)	100.0 (100)	100.0 (75)	100.0 (68)	100.0 (55)	100.0 (25)	100.0 (423)

$\chi^2=264.107$, $df=10$, $p<.001$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명확했다. 프랑스, 영국, 미국은 유엔 결의안에 찬성을, 반면 러시아와 독일은 기권했다.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뉴스채널들의 보도태도는 자국 대외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7>은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프랑스 24와 알 자지라는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명확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프랑스24 81.4%, 알 자지라

70.8%). 씨엔엔(67.0%)과 비비씨(70.0%)는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가장 강하게 취했다. 반면, 러시아 투데이와 도이치 벨레는 우호적 태도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특히 러시아 투데이의 비판적 태도는 57.9%로 다른 채널에 비해 가장 높았다. 반면, 도이치 벨레는 중립적 태도를 60.3%로 가장 많이 다루었다(비판적 태도는 36.8%). 전반적으로 뉴스채널들은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따라감으로써 보도태도와 자국 대외정책간의 연관성을 재확인시켜준다.

<표 8> 비행금지구역(NFZ)에 대한 태도 (단위: %, 괄호 안은 건)

	씨엔엔	비비씨	러시아 투데이	도이치 벨레	프랑스 24	알 자지라	전체
우호적	33.0	30.0	0.0	2.9	81.4	70.8	28.5
중립적	67.0	70.0	42.1	60.3	18.6	29.2	54.7
비판적	0.0	0.0	57.9	36.8	0.0	0.0	16.8
전체	100.0 (100)	100.0 (100)	100.0 (76)	100.0 (68)	100.0(43)	100.0 (24)	100.0 (411)

$\chi^2=255.656$, $df=10$, $p<.001$

리비아 공습에 대한 태도는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태도와 상당 부분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리비아 공습이 가져올 여파는 ‘개입에 관한 논의 국면’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가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뉴스채널들이 공습을 바라보는 태도는 이전과는 또 다르게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9>은 그러한 변화가 반영된 결과를 보여준다. 미국, 영국, 프랑스, 카타르 등 개입 진영에 속한 국가들의 뉴스채널들에서 ‘리비아 공습’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수준보다 모두 완화되는 변화를 보였다. 중립적인 태도 또한 모두 증가했다. 리비아 공습에 대한 아랍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 여론이 작용한 탓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투데이는 앞선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태도에서는 물론 ‘공습’에 대한 태도에서도 일관되게 비판적 자세를 유지해 자국의 대외노선에 충실한 양상을 보였다. 도이치 벨레의 경우 공습에 대해 강한 중립적 태도(73.5%)를 보인 반면, 우호적 태도는 러시아 투데이와 유사하게 1.5%로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물론 여기서도 역시 뉴스채널 보도와 자국 정부의 상관성은 확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알 자지라의 경우 리비아 공습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이번 공습이 “국제 동맹에 의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군사작전임을 강조하였다.

<표 9> 리비아 공습에 대한 태도 (단위: %, 괄호 안은 건)

	씨엔엔	비비씨	러시아 투데이	도이치 벨레	프랑스 24	알 자지라	전체
우호적	29.0	24.0	0.0	1.5	41.2	52.9	18.5
중립적	69.0	76.0	44.7	73.5	58.8	41.2	65.1
비판적	2.0	0.0	55.3	25.0	0.0	5.9	16.4
전체	100.0 (100)	100.0 (100)	100.0 (76)	100.0 (68)	100.0 (17)	100.0 (17)	100.0 (378)

$\chi^2=163.157$, $df=10$, $p<.001$

4) 원인 및 해결책 제시와 자국 대외정책의 관계

언론이 자국의 대외정책을 적극 대변한다면, 언론은 사안의 책임을 어떤 행위자에게 돌려야 하는지, 해결책(대안)은 무엇이고, 그 대안을 누가 주도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국 정부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에 대해 <표 10>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각국 뉴스채널들이 자국의 대외정책의 집행 및 이를 통한 국가이익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가해자’를 지목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24(96.7%)와 알 자지라(96.3%)는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전적으로 ‘카다피’에게 떠넘긴다. 씨엔엔도 94.4%로 ‘카다피’의 책임을 전적으로 물었다. 비비씨에서 ‘카다피’의 책임은 78.4%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카다피의 책임을 가장 우선하는 입장은 동일했다. 카다피를 유일한 ‘가해자’로 지목하는 동시에 이들 매체들은 반군, 국제사회, 제국주의 강대국 등의 문제는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특히 알 자지라와 프랑스24에서 국제사회의 ‘무책임성’을 질문하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뉴스채널에서는 이에 관해 미미하게나마 다루었다. 러시아 투데이에서도 물론 ‘카다피와 그 가족’의 비중은 46.5%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러시아 투데이는 ‘제국주의 강대국’의 책임(38.0%) 또한 강하게 따짐으로써 카다피와 ‘서방’ 양쪽을 비판하는 양비론적 전략을 보였다. 러시아는 또한 ‘언론들이 리비아 사태를 과장해서 보도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서방’과 중동 언론의 문제도 지적하는 차이를 보였다. 도이치 벨레 또한 러시아 투데이와 유사하게 카다피와 그 가족에게 주된 책임(60.9%)을 돌리면서도 제국주의 강대국(21.9%)의 책임도 같이 질문하였다. 특히 도이치 벨레는 다른 뉴스채널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 않았지만, ‘무책임한 국제사회’(4.7%)의 책임도 강하게 제기했다.

<표 10> 1차적 책임 소재 (단위: %, 괄호 안은 건)

	씨엔엔	비비씨	러시아 투데이	도이치 벨레	프랑스 24	알 자지라	전체
카다피와 그 가족	94.4	78.4	46.5	60.9	96.7	96.3	80.7
반군	2.2	0.0	1.4	0.0	0.0	0.0	0.6
제국주의 강대국	2.2	4.1	38.0	21.9	1.1	0.0	9.7
무책임한 국제사회	1.1	1.0	0.0	4.7	0.0	0.0	1.0
아랍리그	0.0	9.3	0.0	4.7	0.0	0.0	2.4
독, 중, 러 등 기회주의 국가들	0.0	0.0	0.0	1.6	0.0	1.2	0.4
언론(서방 및 중동)	0.0	3.1	4.2	0.0	0.0	0.0	1.2
알 카에다	0.0	0.0	2.8	0.0	0.0	0.0	0.4
기타	0.0	4.1	7.0	6.3	2.2	2.5	3.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0)	(97)	(71)	(64)	(90)	(81)	(493)

$\chi^2=194.494, df=40, p<.001$

이상에서 살펴본 분석결과는 뉴스채널들의 의제설정, 정보원 활용, 보도 태도 등이 자국의 대외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실천되었음을 입증한다. 리비아 사태 개입에 우호적이고, 여기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가담하고 있는 국가진영의 뉴스채널들과 그렇지 않은 비판적인 국가들의 뉴스채널 간에

리비아 사태를 보도하는 방식은 명확히 달랐다. 또한, 같은 입장에 속하더라도 개입 의지와 가담 정도에 따른 보도의 차이도 일부 발견됐다.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자국 언론이 리비아 사태의 해법을 무엇으로 바라보는지는 뉴스채널 보도와 자국 정책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된다. <표 11>은 뉴스채널별 해결책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가장 강조된 해법은 정치외교적 방안 모색(전체 34.6%)이다. 정치외교적 해법의 비중은 군사개입에 비판적인 러시아 투데이(43.3%) 및 도이치 벨레(35.5%)는 물론 알 자지라(27.7%)와 프랑스24(42.9%)에서도 고르게 높았다. 물론 프랑스 24는 비행금지구역의 효과적 집행을 강하게 지지했으며(42.9%), 씨엔엔은 리비아 정부군의 붕괴(45.0%)를, 비비씨는 카다피 망명(26.9%)과 리비아 정부군 붕괴(25.8%)를 지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비씨는 정치외교적 해법(25.8%)도 동시에 강조했으며, 알 자지라 또한, 비행금지구역의 효과적 집행(27.7%)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주된 해법으로는 정치외교적 방안(56.9%)을 내세웠다.

러시아와 독일의 뉴스채널들은 모두 정치외교적 해법을 가장 주된 해결책으로 강조했다. 해결책을 리비아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구분해 보면, ‘리비아 정부군 붕괴’나 ‘카다피 망명’과 같은 리비아 내부 행위자들에 관계된 요인(33.3%: 23.0%+11.3%)보다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개입에 관계된 ‘비행금지구역 집행’과 ‘정치외교적 해법 모색’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대한 강조(55.3%: 20.7%+34.6%)가 더 부각됐다. 이러한 보도 지형은 결국 사태 해결에 있어서 국제사회와 서방선진국들의 주도권이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한편, 상대적으로 ‘리비아인들 스스로에 의한 해결’이라는 주권국가의 원칙은 선진국 뉴스채널들의 ‘리비아 담론’ 안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물론 러시아와 같이 ‘서방의 개입은 인도주의적 차원에 국한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는 리비아 국민들이 할 일’이라는 시각도 러시아 투데이를 통해 국제사회로 전파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각국 뉴스채널들은 자국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보도 관행을 보임으로써 국제적인 이슈 안에서 자국의 입장과 관점을 자유롭게 발신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관행의 실천은 ‘서방’ 선진국들이 공유하는 지배적 프레임으로부터 일정하게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1> 리비아 사태 해결책 (단위: %, 괄호 안은 건)

	씨엔엔	비비씨	러시아 투데이	도이치 벨레	프랑스 24	알 자지라	전체
카다피 망명	13.0	26.9	10.0	4.8	0.0	7.7	11.3
리비아 정부군 붕괴	45.0	25.8	26.7	35.5	0.0	1.5	23.0
비행금지구역의 효과적 집행	12.0	8.6	10.0	21.0	42.9	27.7	20.7
정치·외교 방안 모색	22.0	25.8	43.3	35.5	38.1	56.9	34.6
분단국가화(dividing Libya)	0.0	0.0	0.0	0.0	1.2	0.0	0.2
단기 해결책 없음(장기전 등)	1.0	5.4	6.7	3.2	17.9	4.6	6.5
기타	7.0	7.5	3.3	0.0	0.0	1.5	3.7
전체	100.0 (100)	100.0 (93)	100.0 (30)	100.0 (62)	100.0 (84)	100.0 (65)	100.0 (434)

$\chi^2=181.245, df=30, p<.001$

5) 리비아 사태 프레임과 자국 대외정책의 관계

국가이익을 둘러싼 담론 경쟁 혹은 정보 전쟁의 조건하에서 언론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프레임을 확장시켜야 하는 현실적 압력을 요청받는다. 프레임은 특정한 행위자 혹은 이익의 주체성을 의미한다(Entman, 1991, 1993).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디어 보도 프레임은 자국(이익)을 주체로 하는 담론을 통해서 경쟁 담론과 맞서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각국 뉴스채널들이 자국의 입장과 경쟁하고 대립하는 프레임을 보도에 반영할 것이란 기대는 설득력이 없다. 가령, ‘서방의 개입’을 반대하는 또 다른 ‘서방’의 언론이 제3세계 개입을 위해서 서방이 흔하게 내세우는 명분인 ‘인도주의적 개입’ 프레임과 연대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은 ‘서방’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가치라는 점에서, 이른바 ‘서방’ 국가의 일원이 설사 리비아 개입에 반대하더라도 ‘인도주의 개입’의 명분을 전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자국의 대외정책이 표방해 왔던 가치와 관점은 미디어 외교에서 활용되는 담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표 12>은 리비아 사태 보도에서 뉴스채널들이 어떤 프레임들을 배치했는지 보여준다.

<표 12> ‘리비아 사태’에 대한 프레임 (단위: %, 괄호 안은 건)

	씨엔엔	비비씨	러시아 투데이	도이치 벨레	프랑스 24	알 자지라	전체
인도주의 개입	88.8	83.5	2.6	43.8	95.8	94.0	71.7
(서방의) 주권 침해	0.0	0.0	46.1	42.2	1.0	2.4	12.6
침략전쟁	1.0	1.0	50.0	7.8	1.0	1.2	9.1
자업자득	5.1	7.2	0.0	3.1	0.0	1.2	2.9
(자국의) 정치적 목적	2.0	4.1	1.3	0.0	2.1	1.2	1.9
기타	3.1	4.1	0.0	3.1	0.0	0.0	1.7
전체	100.0 (98)	100.0 (97)	100.0 (76)	100.0 (64)	100.0 (96)	100.0 (84)	100.0 (515)

$\chi^2=423.429$, $df=25$, $p<.001$

분석 결과, 리비아 개입에 가담한 국가의 뉴스채널들은 ‘인도주의적 개입’ 프레임을 압도적인 비중으로 다루었다. ‘인도주의적 개입’ 프레임을 강하게 채택한 뉴스채널은 프랑스24(95.8%), 알 자지라(94.0%), 씨엔엔(88.8%), 비비씨(83.5%)였다. 실제 이들 매체에서 인도주의적 개입 프레임은 “그들(카다피)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거나, “리비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관한 논의”, “리비아 혁명 시민들에게 보호 우산을 제공하는 국제 공동체”와 같은 표현으로 전달됐다. ‘인도주의적 개입’을 강조한 이들 4개국 뉴스채널과 다른 보도 행태를 보였던 러시아 투데이는 침략전쟁 프레임(50.0%)과 서방의 주권침해 프레임(48.1%)을 채택함으로써 자국 정책을 대변하는 프레임 전략을 보였다. 독일의 경우는 인도주의적 개입(43.8%)을 인정하면서도 서방의 주권침해 프레임(42.2%)을 비슷한 수준에서 채택함으로써 이중적인 프레임 전략을 보였다. 독일의 ‘정책’과 도이치 벨레의 ‘보도’는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는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명분 앞에서 모호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리비아 사태의 언론 프레임 전략 또한 자국의 대외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미디어 외교에 동원되는 미디어의 프레임 혹은 담론은 자국의 대외정책은 물론, 자국과 타국의 관계, 그리고 자국이 표방하는 가치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및 함의

2011년 8월 현재 리비아 사태는 반군의 승리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군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외세의 영향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리비아가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제2의 이라크와 같은 혼란으로 귀결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반군의 유력한 지도자들 가운데 과거 가다피 전력에 협조한 인사들도 상당수임을 국제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리비아 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노력이 뒷받침될 지도 미지수다. 어떤 경우든 리비아 사태의 비용은 리비아 국민이 짊어지고, 그에 따른 이익은 국제사회의 일부가 차지하는 상황은 불가피하다. 국제사회의 여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불리 한쪽 편을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석유 이권을 둘러싼 탐욕을 비난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자국 국민의 불신을 받는 카다피 정권도 문제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과 관련해서, 이 연구는 미디어외교와 자국 언론 보도의 관계에 주목하여 24시간 뉴스채널의 리비아 관련 보도를 평면적으로 분석했다.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국가별 입장 차이가 뚜렷한 상황에서 뉴스채널들의 보도양상의 차이는 분명했다. 어떤 행위자들에 주목할 것인지에서부터 뉴스채널들의 관심은 달랐다. 인용하는 정보원도 달랐고, 채택하고 있는 관점은 물론 이해당사자들과 현안에 대한 보도태도 역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리비아 사태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있어서도 매체별 차이는 뚜렷했다. 리비아 사태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차이는 물론, 리비아 사태에 대한 자국 정부의 개입의 강도 혹은 수준에 따라서 보도 양상도 의미 있게 차별화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카타르에 속한 뉴스채널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던 러시아 투데이와 도이치 벨레 또한 리비아 개입에 비판적인 자국 정부의 대외정책에 철저히 입각하여 리비아 보도를 구성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요컨대, 언론의 국적을 구분하기 어려운 글로벌 시대에도 불구하고, 각 매체가 뿌리를 두고 있는 국가의 대외정책은 언론을 통해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의 ‘공감과 동의’를 얻기 위해 등장한 24시간 영어뉴스 채널을 통해 미디어 외교가 확인되었으며, 러시아 투데이는 제3세계 또는 비동맹국가에, 알 자지라는 아랍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들 뉴스채널들의 보도는 리비아 사태를 자국의 입장과 관점 안에서 충실하게 재평가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자국의 입장과 관점을 전달했다. 이러한 과정은 뉴스채널들의 보도를 통한 미디어 외교의 현장을 적실하게 보여준다. 한편으로, 이러한 미디어 외교의 현장에서도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정보가 우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제3세계나 비동맹 국가들의 입장 또한 ‘러시아’와 같은 또 다른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취사선택되고 있다는 점 또한 미디어 외교 현장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미디어 외교의 현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일까?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의 국제보도 영역이 고민해 볼 지점은 크게 수신(受信)과 발신(發信)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한국 사회의 국제뉴스 ‘수신’ 방식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동일한 사건도 국가별 입장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서방언론’만 맹목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번 리비아 사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로 인해 한국에서 리비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편협했고, 러시아와 독일 언론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리비아 정부의 딜레마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들 국가의 미디어 외교를 인지하지 못하는 오류도 반복되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수준이 우려할 만큼 낮은 상태에서 ‘서방’에만 의존하는 국제보도로 인해 한국 사회가 ‘성숙하고 건전한’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제뉴스를 수신하고, 수신된 정보를 보다 비판적으로 ‘맥락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하는 한편, 한국의 관심사항과 관점을 국제사회로 제대로 발신(發信)할 수 있는 미디어 전략 혹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 프로파간다의 영화, 드라마와 대중문화 등을 통해 자국의 선전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하고 ‘축적’시키는 특성을 가졌다면 미디어 외교는 보다 ‘의식적’이고 ‘공개적’이고 ‘논리적’인 특성을 갖는다. 특정한 정보를 통제하거나 다른 관점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우호’세력을 확보할 수 없는 디지털 정보 환경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말이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인 영상이 범람하는 현실에서 ‘생산과 유통’에서 일부 강대국과 특정 집단은 과거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리비아의 국영 TV가 여전히 자국의 영토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다수는 리비아 정부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서방’언론을 통해 얻고 있다. UN 결의를 위해 리비아가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정보 전쟁에서도 리비아는 이들 국가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군이 될 수 있는 냉혹한 국제현실에서 ‘정보주권’을 지키지 못한 결과는 참혹하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자국의 입장을 국제사회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한국의 현실도 이런 맥락에서 문제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뉴스정보의 ‘수신’과 ‘발신’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성찰이 요청된다.

이상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리비아 사태는 걸프전이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미국 등 ‘서방’ 강대국들이 주도한 국제분쟁과 달리 중동 “재스민” 혁명의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발발하였다는 점에서 달랐다. 이를 고려한다면, 초기 ‘서방’ 국가와 글로벌 언론 보도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가고, 그 양상이 기존 국제분쟁 연구, 대외정책과 언론 관계 연구 등에서 확인된 결과들과 어떻게 다르고, 다르다면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또한 검토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24시간 뉴스채널, 국가, 대외정책 간 관계를 평면적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분석 대상과 관련하여, 중국이나 다른 아랍권 언론 매체를 함께 살펴볼 여지도 있었고, 한국의 뉴스채널과 미디어들의 보도도 함께 점검할 필요도 있었다. 24시간 영어뉴스 채널을 분석한다고 했지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뉴스채널들이 제공하는 영상 뉴스는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뉴스채널 보도 분석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대외정책과 언론보도의 양상을 살펴봄에 있어서 태도, 정보원, 프레임, 원인과 해법의 제시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는 할 수 있었지만, 각각의 측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측정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한계로 남는다. 미디어 외교의 현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량적 분석 외에도 구체적인 표현, 단어, 진술문 등을 분석함으로써 미디어 외교와 언론 보도의 관계를 질적으로 보다 풍부하게 드러낼 필요도 있다. 추가 연구에서는 담론분석과 같은 질적연구방법을 병행해서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도 있으며, 국제정치와 같은 거시적 현실과 맞물린 이슈리는 점에서 비판적 담론 분석(CDA) 방법에 의한 접근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

Ⅰ 참고문헌

- 김기정 (2009).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술연구원. 『한국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제10차 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포럼, 11~38.
- 김남두 (2007). 9/11 이후 영미 신문의 알자리라 인용보도 및 아랍방송 관련 취재원 사용 패턴의 비교분석. 『한국언론학보』, 51권 4호, 155~180.
- 김성해 (2008). 국가이익과 언론: 미국 엘리트 언론의 국제통화체제 위기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2호, 205~248.
- _____ (2011). 글로벌 시대, 국가이익 그리고 미디어외교: 24시간 영어뉴스 채널의 현장과 시사점. 한국언론학회·연합뉴스 공동 세미나 발제문. 서울: 프레스센터.
- 김성해·강국진 (2009). 『국가의 품격과 저널리즘 외교』.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성해·심영섭 (2010). 『국제뉴스의 빈곤과 국가의 위기』.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은규 (2005). 21세기 국제정보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언론정보학보』, 34호, 34~62.
- 심훈 (2004). 1995년 북한 기아에 대한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분석. 『한국언론학보』, 57~83.
- 김영옥 외 (2006). 『미디어에 나타난 이웃: 한중일 언론의 상호국가보도』. 서울: 한국언론재단.
- 유현석 (2009). 한국의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소프트파워 전략. 한국학술연구원.
- 윤영철 (2002). 반테러 전쟁과 미국 언론의 역할. 『계간 사상』, 2002 봄호, 206~225.
- 이창호 (2004) 뉴욕타임스, 아랍뉴스, 중동타임스의 이라크전쟁 보도 비교.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84~109.
- 최경진 (2003). 한국의 정부와 언론의 갈등적 관계에 관한 일 고찰.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적 행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3권 3호, 95~132.
- 최용주 (1996).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언론과 정치의 상호침투. 『언론과 사회』, 11권 1호, 6~33.
- 최영재 (2008). 새 정부의 미디어정책과 뉴스전문 채널의 위상 변화.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다매체 시대 뉴스전문 채널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 발표문. 서울.
- Burns, N. (1996). Talking to the World about American Foreign Policy. *The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 10~14.
- Cherribi, S. (2009). U.S. public diplomacy in the Arab world: Responses to Al-Jazeera's interview with Karen Hugh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2, 755~771.
- Dayan, D & Katz, E. (1992). *Media events: the live broadcasting of histo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Dinh, T. V. (1987). *Communication and Diplomacy in a Changing World*. Norwood, NJ: Ablex, 51~52.
- Entman, R.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 6~27.
- _____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Esser, F. (2009). Metacoverage of mediated wars: How the press framed the role of the news media and of military news management in the Iraq wars of 1991 and 2003,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2, 709~734.
- Fleiss, J. L. (1971). Measuring nominal scale agreement among many raters. *Psychological Bulletin*, Vol. 76, No.5, 378~382.
- Gans, H. J. (1979).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Pantheon Books..
- Gilboa, E. (1990). Effects of televised presidential addresses on public opinion: President Reagan and terrorism in the Middle East.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20, 43~53.
- Gitlin, T. (2003).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 unmaking of the New Lef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raber, D. (2009). Looking at the United States through distorted lenses: Entertainment television versus public diplomacy them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2, 735~754.
- Herman, E. S. & N. Chomsky (1989).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ass media*, NY: Pantheon Books.
- Kalb, M. & Kalb, B. (1974). *Kissinger*. Boston: Little Brown.
- Larson, J. F. (1986). Television and U.S. Foreign Policy: The Case of the Iran Hostage Crisis. *Journal of Communication*, 36(4), 108~130.
- Leonard, M. (2002). *Public Diplomacy*. London: Foreign Policy Centre. 유재웅 외 역 (2008). 『이미지 외교』. 서울: 한나래.
- Leonard, M. & Small, A. (2003). *Norwegian Public Diplomacy*. 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re.
- Lewis, J., Cushion, S., & Thomas, J. (2005). Immediacy, convenience or Engagement?: An analysis of 24-hour news channels in the UK. *Journalism Studies*, 6(4), 461~477.
- McDowell, M. (2008): Public diplomacy at the crossroads: definitions and challenges in an “open source” era, in: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32(3), 7~15.
- Melissen, J. (2007). *The New Public Diplomacy*.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Nacos, B., Shapiro, R. & Isernia (2000). *Decision making in a glass house: Mass Media, public opinion, and American and European foreign policy in the 21st century*. Lanham, NY: Rowman & Littlefield.
- Neuman, J. (1996). *Lights, camera, war: Is media technology driving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 Newsom, D. (1988). *Diplomacy and the American democrac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Nye, J.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Press.
- O’Heffernan, P. (1991). *Mass media and American foreign policy: Insider perspectives on global journalism and the foreign policy process*. Norwood, NJ: Ablex.
- Rabinovich, I. (1998). *The brink of peach: The Israeli-Syrian negotiations*.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binson, P., Goddard, P. & Parry, K. (2009). U.K media and media management during the 2003 invasion of Iraq,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2, 678~688.
- Semetko, H. & Kolmer, C. (2009). Framing the Iraq war: Perspectives from American, U.K., Czech, German, South African, and Al-Jazeera New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2, 643~656.
- Sigal, Leon. V. (1973). *Reporters and officials: The organization and politics of newsmaking*. Lexington, MA: D. C. Heath.
- Tomlinson, J. (1999). *Globalization and cul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aleriani, R. (1979). *Travels with Henry*. Houghton-Mifflin, Boston, MA.

Volkmer, I. (2003). The global network society and the global public sphere. *Development*, 46(1), 9~16.

Walt, S. M. (2005). *Taming American Power: The Global Response to U.S. Primacy*. Norton Books.

(투고일자: 2011. 5. 31, 수정일자: 2011. 10. 24, 게재확정일자: 2011. 11. 2)

ABSTRACT

Media Diplomacy in the Time of Digital Revolution: A Case Study about 24 Hour English News Channel's Dealing with Libya Crisis in 2011

Sung-Hae Kim* · Yong-min You** · Jae-Hyun Kim*** · Hye-min Choi****

Recently, media diplomacy takes on a substantial role in information war not only in setting global agenda but also in delivering their favored views and frames. Focusing on its crucial impact,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prestigious media's news coverage and its own foreign policy particularly about the 2011 Libya conflict. The total of 530 news articles in such 24 hour English news channels as BBC World, Cnn International, Russia Today, France24, Al Jazeera English and Deutsche Welle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analyses reveal that Libya coverages of those news channels are entirely constructed in the context of the foreign policy. To put it concretely, there was the undeniable level of differences in terms of quoting relevant sources, viewpoints, attitudes and frames for the pursuit of media diplomacy helped by high quality journalism. The authors argue in this regard that protecting information sovereignty should be urgently discussed even in the time of digital revolution. To launch 24-hour English news channel like 'Korea 24' would be a possible strategy for influencing global agenda and perspective in way of supporting national interests.

Keywords: Media Diplomacy, Propaganda, 24-hour News Channel,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ternational Information Order, Soft Power, Korea 24

* Lecturer, Dep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Daegu University

** Ph. D. Student,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Arts, Yonsei University

*** MA. Student,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Arts, Yonsei University

**** MA. Student,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Arts, Yonsei University